

수입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IRP 납입액 연간 900만원 절세

주식 전성시대와 재테크

③ 연금 극대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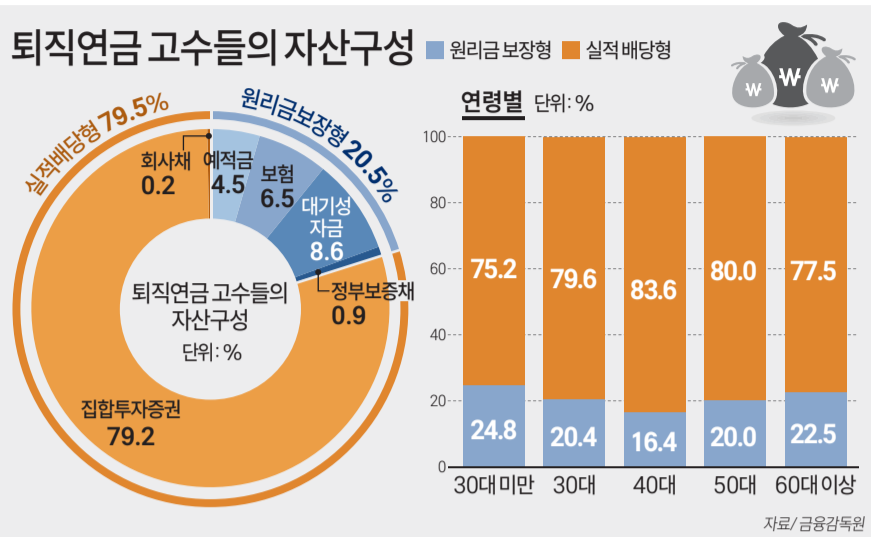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노후 재테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자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은퇴 이후에도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자산 소모도 최소화해 질병 등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이 발표한 '국민노후패널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민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197만6000원이다. 은퇴 이후 30년의 노후를 가정하면 대략 7억원의 자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적금이나 투자상품 등 금융자산만으로 7억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연금자산'을 튼튼하게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 국민연금, 많이·오래 낼수록 유리

연금자산의 가장 큰 축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59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유지한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나며, 지급이 개시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만큼 납입 우선순위가 특히 높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하면 개시 후 사망시까지 연금받아

연금저축, 가입 5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 적립액 지급

원리금 비보장 증시·펀드 상품 연금자산 극대화·기대수익 ↑

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만 50세가 된 1976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비(낸 돈과 비교해 받는 금액)는 2.6배(25년 수급 가정)다. 올해 20살이 되는 2006년생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보험료율 인상에도 예상되는 수익비는 1.68배다. 수급 기간이 25년보다 길다면 수익비도 커진다. '100세시대'에 국민연금이 중요해진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납입 ▲임의가입 ▲임의계속납입 등 별도로 마련된 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납입'은 실직·휴직·육아 등을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9년11개월(119개월)분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액 및 납입기간으로 인정되며, 추후 지급되는 국민연금 지급액에 반영된다.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의무가입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납입 이력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6년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은 매달 9만5000원~55만5300원이며,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미 납입한 금액 및 가입 기간은 인정된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64세에도 국민연금 납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납입액과 납입기간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 개인형 IRP·연금저축, 일찍 시작해야

안정적인 연금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선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일찍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절세혜택을 제공한다. 일찍 가입할 수록 혜택도 누려진다. 연금저축과 연계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결합하면 절세 혜택은 극대화된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간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납입액은 펀드, ETF, 리츠 등 투자상품에 투자를 지시할 수 있다. 또한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운용 방식이 유사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납입액은 국고채·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더불어 펀드·ETF 등

투자상품까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원리금 보장' 최소화... '노는 돈' 줄여야

연금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보다는 증시·펀드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 노동자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장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IRP, 연금저축은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운용사 앱이나 홈페이지, 대리점을 통해 운용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단리)의 취급금리 평균은 연 2.8%다. 퇴직연금 운용 시 지정 가능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연 2%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거나 운용이 번거로운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도)'을 활용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은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다면 가입자가 가입 당시에 지정된 방식으로 납입액을 운용하는 제도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각 운용사가 투자주기에 위험도별 펀드 상품을 운용 중인 만큼,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진성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22개 생보사 CEO, 소비자 신뢰회복 결의

생보협회 '생명보험 약속의 날' 행사 모든 의사결정 '소비자 기준' 전환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전 생명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당 영업과 복잡한 상품 구조, 보험금 지급 불신 등 업권의 고질적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공동 결의를 내놨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 약속의 날(Promise Day)' 행사를

열고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을 위한 '소비자와의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생보사(22개사) CEO와 협회 임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생보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차원의 실천 의지를 공식화한 자리다.

전 생보사 CEO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이익 우려가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내

용도 담았다.

보험금 지급과 금융 포용도 주요 약속에 포함됐다. 생보업계는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고, 누구도 보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의했다.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상생보험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공개한 결의문에는 상품 개발과 판매 단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어려운 약관과 안내자료를 쉽고 명확하게 바꾸고,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분쟁을 예방하

겠다는 취지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자율적 신뢰 회복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생보업계가 금융업권 최초로 자율적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다짐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 제고를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오늘의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가 생명보험업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BIS이사회 이사 선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서 발언권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지난 11일 현지시각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신 총재는 같은 날부터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BIS이사회는 BIS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주요 업무 운영 정책 결정, 정관 개정 발의, 신규 회원 가입 결정, 사무총장 등 집행부 간부 임명 및 감독, 총회 의제와 개최일 결정 등을 담당한다.

이사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중앙은행 총재 등 창립회원국 총재 6명이 당연직 이사를 맡고,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명직 이사로 참여한다.

2026년 5월 기준 선출직 이사는 스웨덴, 스위스,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중앙은행 총재로 구성돼 있다. /김주형 기자



2400억 장기 연체채권, 새도약기금에 매각

신한카드, 차주 추심중단 등 효과

신한카드가 민간부실채권처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2400억원 규모의 차주 장기 연체채권을 모두 새도약기금에 넘기기로 했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금융사가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빛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상록수채

권'이 차주 추심중단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차주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금융권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다. 신한카드는 상록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상록수에서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신한카드 장기 연체채권 금액은 총 2400억원 규모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될 경우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 즉시 중단 ▲상환 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및 분할 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으로 소각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 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상록수가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발생하는 수익으로 카드사들이 배당 이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